

6·3 지방선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대진표 윤곽

민주 민형배 vs 진보 이종욱 vs 정의 강은미 맞대결 국민의힘, 안태욱·이정현 출사표...경선 여부 관심

40년 만에 하나가 되는 전남·광주를 이끌 수장을 뽑는 6·3 지방선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진보당 이종욱, 정의당 강은미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본선 주자로 민형배 후보가 확정되면서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14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이날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결선투표에서 민형배 후보가 승리하며 최종 후보로 뽑혔다. 민주당 경선은 지난 19일 예비경선을 시작으로 본경선과 결선투표로 진행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출마이단 거대 당

론 속에 8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지만, 경선 방식에 이견을 표한 이계호·이병훈 후보가 경선에 참여하지 않으며 강기정·김영록·민형배·신정훈·정준호 후보가 예비 경선을 치렀다. 이후 정준호 후보가 탈락하며 5인 경선으로 시작된 본경선은 합동연행이 이어지며 구도가 변화가 생겼다. 강기정 후보와 신정훈 후보가 단일화를 하며 연대를 구축했고, 민형배 후보와 주철현 후보도 단일화를 이루며 최종적으로 김영록·민형배·신정훈 3인 구도가 만들어졌다. 본경선에서 신 후보가 탈락한 가운데 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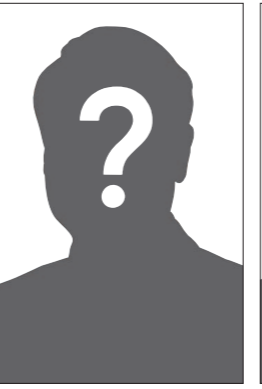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진보당 이종욱



정의당 강은미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러진 결선에서는 민형배 후보가 김영록 후보를 꺾고 민주당 통합특별시장 주자로 나섰다. 이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구도는 민형배 후보와 함께 진보당 이종욱, 정의당 강은미 후보로 윤곽을 갖추게 됐다. 6·3 지방선거 본선에 나서는 민형배 후

보 '혁신'이 강점으로, 행정통합 국민에서 통합특별시의 미래 청사진을 완성할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초첨단산업으로의 산업 체제 제편을 통해 통합특별시를 새로운 반도체·AI 거점으로 키우는 미래를 제시하고 있다. 진보당 이종욱 후보는 광주시당과 전남

도당의 속의 끝에 통합시장 후보로 추대됐다. 그는 피지컬 AI, 모빌리티, 재생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 육성과 기존의 국가기간산업 고도화로 지역의 경제자립, 재정자립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으로 유권자와 접점을 늘리고 있다.

정의당에서는 강은미 전 의원이 후보로 된다. 강 후보는 노동·돌봄·탄소중립을 축으로 한 '대안 정치' 실현을 내세우고 있다. 또 행정통합이 특정 정당의 권력 강화로 귀결돼선 안된다는 기치를 강조하며 시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실현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후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정현 전 공천관리위원장과 안태욱 광주시당위원장이 도전장을 던졌다. 국민의힘 공천위가 서류 심사의 면접 심사를 거쳐 후보들의 자질과 경쟁력을 살핀 뒤 여론조사 결과까지 함께 반영해 경선 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 조만간 전남광주통합시장 본선의 대진표가 완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통합 주도했으나 개혁·선명성 밀려...김영록 3선 실패

3선 피로감·성과·비전 부족 등 패배 요인 꼽혀

김영록 전남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에서 민형배 의원에 패배하며 3선 도전에 실패했다. 전남과 광주 행정통합을 가장 먼저 제안하고 추진을 주도해온 당사자가 경선에서 탈락하면서, 통합 논의의 주도권 역시 새 국면을 맞게 됐다. 김 지사는 지난해 말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공식 제안하며 논의를 끌어올렸다. 실국장회의에서 추진기회단 구성을 지시한 직후 강기정 광주시장의 공명 추진에 동의하면서 통합 논의의 급물살을 탔다. 양 시·도는 올해 1월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공동선언을 발표하며 40년 만

의 재통합 추진을 공식화했고, 이후 통합 구상과 정책 설계는 사실상 김 지사가 주도해왔다. 경선 과정에서 김 지사는 통합을 핵심 의제로 전면에 내세웠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 300만 규모 초광역 도시권을 구축해야 한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광주권·동부권·서부권·남부권을 묶는 '3+1 권역' 구상과 'Y4-노믹스'를 제시했다. 흡수 통합이 아닌 상생통합을 강조하며 도민 불안을 낮추는 데도 주력했다. 세 확장 역시 일정 부분 성과를 냈다. 이병훈 전 의원을 총괄상임선대위원장



시장과의 연대를 이끌어내며 조직 결집을 강화했다.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과 박광태 전 광주시장, 주승윤 전 국토부 장관 등 원로 정치인의 지지, 송영길 전 대표의 명예후원회장 합류까지 더해지며 외연은 크게 넓어졌다. 하지만 표심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 안정적 행정 경험을 앞세운 전략이 경선의 핵심 변수였던 '변화 요구'를 따라가지 못했다. 지역 민주당 지지층의 특성상 개혁성과 선명성이 중요해, 민형배 의원이 내세운 시민참여와 구조 개혁 메시지가 더 강하게 작용했다는 평가다. 김 지사의 이력은 분명한 강점이었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전남도 행정부지사, 국회의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전남지사를 거치며 축적한 행정 경험은 통합 초기 안정적 운영에 적합한 카드로 평가됐다. 그러나 이러한 강점이 오히려 변화 요구와 충돌하면서 확장성에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3선 도전에 따른 피로감도 영향을 미쳤다. 8년간 도정을 이끈 경험은 자산이었지만, 일부 현안에서의 대응과정에서 제기된 결단력 논란은 부담으로 작용했다. 전남 국립의대 선정 과정 등 주요 정책 이슈에서 나타난 혼선이 경선 국면에서 다시 부각됐다는 시각도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좌석 늘고 요금 낮추고 KTX·SRT 하나로 호남선 달린다

중편 운행 시범 도입 시행 광주송정~수서 주말 열차 내일 오전 7시부터 예매

다음 달 15일부터 KTX와 SRT가 호남선 등 일부 노선에서 하나로 이어진 채 달리면서 열차 좌석 공급을 확대하는 '중편 운행'이 시행된다. 호남선 고속열차 이용객들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SRT 운영사 에스알(SR)은 15일 오전 7시부터 중편운행 열차 승차권 예매를 시작한다. 코레일과 SR의 모바일 앱과 누리집, 역 창구와 자동발매기를 이용하면 된다. 이들 열차의 출발시간은 기존과 같지만, 앞뒤 열차의 종류가 달라 온라인 예매 시 KTX와 SRT를 모두 조회해야 열차를 빠짐없이 확인할 수 있다. 시범 중편운행은 호남선과 경부선 일부 구간에서 이뤄진다. 호남선은 매주 토·일요일에 수서역과 광주송정역을 오가는 일부 열차에 적용된다. 기존에 한 대의 열차로 운행하던 SRT(410석)에 KTX-산천(410석)을 추가로 연결해 운행하면서 좌석 공급이 820석으로 늘어난다.

경부선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부산·포항~서울(상행), 서울~부산·마산(하행) 구간 일부 열차에 적용된다. 기존에 KTX끼리 이어진 채 다니던 열차를 KTX와 SRT 연결로 변경해 운행한다. 총 좌석공급 규모는 동일하지만, 이를 통해 연결 운행에 따른 안전성과 이용 편의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월·금요일 일부 열차는 코레일·SR이 고속철도 통합 협의회를 통해 협력해 추가로 확보한 SRT 차량을 연결해 좌석공급을 확대한다. 이번 시범 중편운행으로 선로를 추가하지 않고도 수서역 출발·도착 고속열차 공급 좌석이 일주일에 2870석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중편운행 열차의 KTX 운임은 약 10% 할인해 SRT 수준으로 맞춰 이용 혼선을 줄이고 국민 혜택을 확대한다. 수서역에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KTX도 똑같이 약 10% 할인된 운임이 적용된다. 운임이 할인되는 열차에서는 마일리지 적립되지 않는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9월 고속철도 통합을 앞두고 지난해 말부터 KTX-SRT 연결, 시운전 등을 진행 중이다. 또 실제 탑승객들의 이용 불편이 없도록 예매부터 승·하차까지 전 과정을 살피고 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전남도 통합방위회의 전남도는 14일 도청 정철실에서 황기연 전남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지역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2026년 전남도 통합방위회의'를 개최, 지역 안보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육군 31보병사단장, 해군 3함대사령관, 전남도경찰청장,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시장·군수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제공=전남도청

트럼프, 2기 첫 주한대사에 한국계 미셸 스틸 지명 전 하원의원 출신...성김 전 대사 이어 두 번째 기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자신의 2기 행정부 첫 주한대사 후보로 한국계 여성 정치인 미셸 박 스틸(70·한국명 박은주·사진) 전 연방 하원의원을 지명했다. 백악관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주한미국대사 지명을 발표하고 연방 상원에 인준을 요청했다. 상원의 인사청문회와 인준 표결을 거쳐 정식 임명되면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된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가 지난 해 1월 임한 뒤 현재까지 1년 넘게 이어진 주한미국대사 공백 상황이 해소될 전망이다. 그동안 워싱턴과 직접 소통할 주한미국대사가 공식인 상태가 이어지면서 한국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외교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왔지만, 이번 지명을 계기로 한미 간 상시적인 외교 소통 채널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스티爾 지명자는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유력한 주한미국대사 후보군으로 거론됐다가 이번 최종 낙점을 받았다. 스틸 지명자가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성 김 전 대사(2011~2014년) 이후 두 번째 한국계 주한미국대사 기록을 세우게 된다.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난 스틸 지명자는 청소년기 일본을 거쳐 1975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다. 광범한 주부였던 스틸 지명자는 로스앤젤레스(LA) 폭동 사태를 계기로 한국계의 경제 진출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다.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의장을 지낸 남편 스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치권에 입문한 스틸 지명자는 캘리포니아주 조세 혁명권 선출 위원, 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행정책임자) 등을 역임했다. 연합뉴스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70만원 지급

전남도는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기존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10만원 인상에 이달 중 시·군을 통해 지급한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임업의 공익적 가치 보전과 경영 안정을 위해 2020년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124만명에게 총 7436억원이 지급됐으며, 올해 지급 규모는 도비 599억원(40%)과 시·군비 899억원(60%) 등 총 1498억원이다. 지급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남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어·임업

에 종사한 경영주 21만4037명이다. 전남도는 2~3월 신청을 받아 자격 검증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했다. 공익수당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카드 형태의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전남도는 지역화폐 지급 방식이 농어민 소득 증대뿐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과 지역업자 매출 증가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나 농협을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노선버스·심야화물차,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오는 16일부터 한 달 동안 전국 재정고속도로에서 노선버스와 심야화물차의 통행료가 전액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운송업계의 부담을 덜고 민생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노선버스는 16일 자정부터 다음 달 15일 자정까지, 심야화물차는 16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달 16일 오후 9시까지 통행료가 면제된다. 노선버스 통행료 면제 대상은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노선버스 차량이다. 일단 정

상 과금 후, 한 달간의 이용 내역을 정산해 신청 시 환급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심야 화물차는 현재 30~50%의 통행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데서 100% 면제로 확대한다. 주행한 거리에 비례해 요금을 부과하는 폐쇄식 구간은 오후 9시~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운행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요금소를 통과할 때마다 정해진 금액을 받는 개방식 구간은 오후 11시~다음 날 오전 5시 사이 통과하는 경우 면제가 적용된다. 엄재용 기자 djawody0316@